

G-Welfare Weekly Report

01

중앙정부 정책동향

1. 보건복지부,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한다

01 주요 내용

- 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문 기구를 오는 4월 신설할 예정
- 보건복지부는 3월 8일 조달청을 통해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하였으며, 공모는 3월 24일까지 계속되며 접수가 끝나는 대로 심사에 들어가 위탁 운용할 기관을 최종 선정해 4월에는 센터가 출범할 계획
 - [설치 근거]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사회보장급여법)
 - [업무 내용] 향후 전국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사회보장 추진현황을 분석하고, 각 지자체가 마련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평가하는 한편, 이를 바탕으로 지역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

02 경기도에의 시사점

- 중앙정부가 정한 복지 기준은 경기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
 - 소득과 재산 위주의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토지나 주택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에 불리하여 낮은 수급률로 이어짐
- 경기도 내부적으로도 31개 시·군 간 복지 불균형은 심각한 편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센터 1개소만으로 경기도 내부 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경기도 단위의 균형발전센터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요구
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: 연천(6.13%)—용인(1.03%) 간 약 6.0배
 - 노인인구 비율 : 연천(21.77%)—오산(7.08%) 간 3.1배
 - 1인당 노령연금 : 용인(413,83천원)—연천(270.43천원)
- 경기도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, 지역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
 -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개념: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(보편성),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(포괄성),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정 수준(적정성)이며,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고, 불평등과 빈곤감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

• 이와 관련하여 시·군, 현장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 중

지역	일시	장소
1 권역 의정부 김포 파주 고양 연천 포천 동두천	3.22.(화) 10:00	경기북부상공회의소 소회의실
2 권역 남양주 양평 가평 구리 하남 양주	3.22.(화) 15:00	퇴계원도서관 다목적강당
3 권역 안산 부천 광명 안양 시흥	3.23.(수) 10:00	상록구청 대회의실
4 권역 군포 의왕 오산 화성 수원 과천	3.23.(수) 15:00	경기광역치매센터 교육실
5 권역 용인 안성 이천 여주 광주 성남 평택	3.25.(화) 10:00	용인시청 비전홀

2. 통계청, 「살고싶은 우리동네」 서비스 개시

01 주요 내용

- 통계청은 생활편익시설과 교육환경, 자연환경 등 7개 분야 27개의 세부지표를 이용하여 주거지 선정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리스트와 통계 정보 등을 제공하는 「살고 싶은 우리동네」 서비스를 시작(16.3.15.)
 - 「살고싶은 우리동네」는 2015년 정부 3.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‘통계로 찾은 살고 싶은 우리 집’을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으로, 인구, 주택, 사업체 등 통계청 통계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지역을 찾아주는 서비스
 - 개인별 주거지 선호도 및 중요도에 따라 관심지표를 설정하면 이사하기 적합한 지역을 추천
- ① 자연 : 대기오염도, 생활날씨, 녹지비율
 - ② 주택 : 아파트 가격, 공동주택비율, 주거면적, 노후주택비율, 자가점유비율
 - ③ 지역인구 : 청장년인구비율, 혈연가구비율, 사업체중사자비율, 순유입인구비율
 - ④ 안전 : 화재안전, 교통사고안전
 - ⑤ 생활편의/교통 : 편의시설, 쇼핑시설, 외식시설, 대중교통접근성, 대중교통이용률
 - ⑥ 교육 : 교원인당학생수, 고등교육기관수, 학원수
 - ⑦ 복지/문화 : 유치원·보육시설, 병의원·약국, 노인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, 문화체육시설
- 통계청은 「살고싶은 우리동네」 서비스를 토대로 개인의 맞춤형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
 - 행정자치부도 「시·도행정정보시스템」과 「시·군·구(서울)행정정보시스템」의 공공데이터 일부를 개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새로운 사회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

<http://sgis.kostat.go.kr>

*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함

02 경기도에의 시사점

- 경기도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회·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「경기데이터드림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(15.9.23.)
 - 경기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체계화하고 통합·개방하여 도민과 공유하고 민간의 활용 촉진
- 점차적으로 개방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민의 수요가 높은 복지,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단계적 구축 필요
 - 시·군·구(서울)행정정보시스템에서 소방·재난·안전·교통·건설·환경·관광·문화·체육 등 9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발굴·수집
 - 경기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 앱(App) 개발,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체계 구축
- 경기복지재단은 산재해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도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「복지자원 공유 플랫폼」 사업을 추진
 - 복지정보플랫폼(1단계) : 복지 분야의 다양한 통계와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
 - 기부플랫폼(2단계) : 제공자는 나눌 수 있는 자원(재능시간자원봉사 등)을, 수혜자는 자신의 욕구를 등록하고 플랫폼을 통해 매칭
 - 공유복지플랫폼(3단계) : 복지활동을 시장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
 - 복지자원 공유 플랫폼의 최종목표는 복지자원 등 다양한 자원 및 이해관계자의 연계를 통한 자원의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자원거래소(Social Resources Exchanges, SRE)로 전환·확장하는 것임

경기데이터드림
(data.gg.go.kr)

02 사도/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1. 경기도 장애인복지 허브, 누림센터 개관

지난 3월 15일 경기도가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도 단위 역할 중심으로 개편 후 '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'로 전환한다고 발표

- 경기도에는 2016년 현재 총 34곳의 장애인복지관이 설치·운영 중이며, 종별로는 종합장애인복지관이 33곳, 시각장애인복지관이 1곳임
 - 전국에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은 총 218곳*이며, 경기도의 경우 수원·용인 3곳, 안양·안산·평택·의정부 2곳 등 34곳이 운영 중이나, 등록장애인 대비 총족률은 낮은 편임
 - 전국 장애인복지관 종별 분포는 종합 181곳, 시각 14곳, 지적·청각 6곳, 지체 5곳, 뇌성마비 4곳, 발달 2곳 순이며, 경기도의 경우 종합 33곳, 시각 1곳으로 타 지역에 비해 종별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한 편임

*신규설치 예정은 미포함: 인천동구(종합), 하남미사(종합)

〈표 1〉 도내 시·군별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현황

시군	현황		시군	현황		시군	현황		시군	현황	
	종별	개소		종별	개소		종별	개소		종별	개소
수원	종합	3	동두천	종합	1	군포	종합	1	화성	종합	1
성남	종합	2	안산	종합	2	의왕	종합	1	광주	종합	1
의정부	종합	1	고양	종합	1	하남	종합	(1)	양주	-	-
	시각	1	과천	종합	1	용인	종합	3	포천	-	-
안양	종합	2	구리	종합	1	파주	종합	1	여주	종합	1
부천	종합	1	남양주	종합	1	이천	종합	1	연천	-	-
광명	종합	1	오산	-	-	안성	-	-	가평	종합	1
평택	종합	2	시흥	종합	1	김포	종합	1	양평	종합	1

*단위: 개소, %

- 2004년 개관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당시 장애인복지관이 없던 수원시 남·서부 지역에서 지역장애인복지관 기능을 수행하였으나, 일련의 환경변화로 기능전환 요구에 직면
 - 도내 장애인복지관이 10곳에 불과하던 개관 당시 수원지역 장애인들의 서비스 요구가 폭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직접사업을 주로 수행
 - 이후 수원지역 복지인프라 증가 및 복지육구 다양화에 따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독립 복지지원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광역지원 기능 확대 등 대내외적 변화 요구에 직면
- 지난 3월 15일 경기도는 “기존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 및 기능전환하여 ‘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(약칭 누림센터)’로 개편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”한다고 발표
 - 누림센터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기능전환을 통해 향후 광역지원기능·허브기능·네트워킹기능을 수행 예정*: 주요사업은 도내 시·군별 장애인복지관 지원, 종사자 역량강화,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 운영, 관련 단체·기관 네트워킹 등임
- 향후 지속적 광역사업 개발과 경기도 허브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인복지 선도 역할 기대

*운영주체: 경기복지재단(2015~)

2. 재단 주요행사 안내

기관/행사명	주요내용
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개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 시 : 3. 24.(목) 10:20~11:20 장 소 :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내 용 : 관계기관 MOU 체결·현판 제막식·부대행사 등
2016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 제 : 2016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 "나의 아이디어로 따뜻한 경기도"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공지사항 참조(☎267-9333) 기 간 : 3. 14.(월) ~ 4. 12.(화) 주 최 : 경기복지재단·삼성전자 대 상 :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·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 또는 개인

03 FACT CHEC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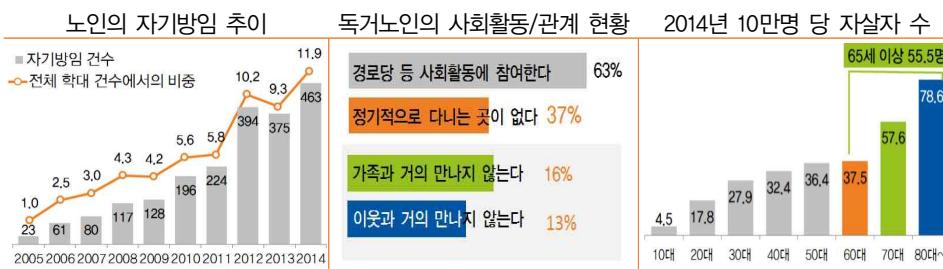
한국의 빈곤 노인, 자산만 있고 소득은 없다

-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,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.6%로 OECD 회원국 중 1위, 평균(12.6%)보다 4배 정도 높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‘빈곤’ 상태에 빠져 있다는 한국 노인 중 상당수는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‘가난한’ 노인의 19.9~50.8%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,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%(1분위) 노인부부 가운데 6.3%는 재산 기준 분류에서 상위 20%에 속함
-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게 산출되는 이유는 빈곤율의 주요지표가 공적연금, 퇴직연금 등 가처분소득 중심으로 구성되어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
 -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, 수입이 없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음
-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주택 등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소득보전방안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상속문화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, 주택연금, 농지연금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
 - 주택연금은 2015년 기준 연간 누적가입자수가 29,120명(60세 이상 가입가능)으로 2015년 노인인구(65세 이상) 662만명 중 0.004%만이 가입
- 노인가구의 자산 규모를 고려한 정확한 빈곤 실태 파악과 동시에, 현재 운용되고 있는 주택연금 외에 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활용하여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
- 또한 자녀의 부모부양의식이 약화되는 만큼, 노인들이 직접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, ‘노후준비지원센터’를 통해 자산 기반의 노후소득보장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

원시연(2016). 지표로 보는 이슈: 노인의 빈곤관련 지표 현황과 시사점. 국회입법조사처.('16.3.11.)

04 통계로 보는 복지

스스로를 포기하는 노인의 자기방임



자료 : 보건복지부,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, 독거노인 생활실태조사 보도자료(중), 중앙자살예방협회(우)

-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와 같은 돌봄 행위를 거부하는 것으로 관련 건수는 2005년 23건(1.0%)에서 2014년 463건(11.9%)으로 증가 추세
 - 자기방임 노인의 경우,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외부의 도움을 거부하는 경향이 큼
- 독거노인 생활실태조사* 결과, 경로당, 복지관, 종교시설 등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37%, 이웃과 연 1~2회 이내로 거의 왕래하지 않는 경우도 13%로 나타남
 - 자기방임의 극단적 결말은 자살로 이어져,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014년 55.5명으로 OECD 평균 19.1명에 비해 높은 편
- 노인의 자기방임은 부양의식의 약화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노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더 상위 가치인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됨

*단위: 건, 명, %

*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2015.1~3월 조사